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정은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국문요약

통일의식은 남북한 주민이 통일에 대해 갖는 사상·관념·감정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포함한다. 이 연구는 남북한 주민 간 통일의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통일의식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남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3년간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 자료로 사용된 조사 데이터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1년~2013년에 실시한 『통일의식 조사』와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이다.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을 비교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주민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은 점차 악화되는 반면에 북한 주민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높다. 남한 주민의 통일 인식은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 일관되게 통일에 대한 높은 열망을 보였다. 둘째,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는 남한 주민에 비해 북한 주민이 더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셋째,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 남한 주민에 비해 북한 주민이 훨씬 더 기대감

* 이 논문은 “다중전환의 도전과 비판사회학”의 주제로 개최된 2013년 비판사회학 대회(성공회대학교 미가엘관, 2013년 10월 26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북한 주민 모두 상대방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경제대상, 적대대상으로서의 인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상호 수용성의 격차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북한 주민보다 오히려 남한 주민의 배타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오랜 분단체제는 남북한 간의 상이한 정치체제의 수준을 넘어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남한 주민의 북한 문화 접촉 경험 수준은 북한 주민이 남한 문화 접촉 경험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변국에 대해 남북한 주민이 상이한 인식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서 남한 주민은 북한을, 북한 주민은 미국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주제어: 통일의식, 남북관계, 통일이의, 통일비용, 사회통합, 수용성, 배타성

I. 들어가며

통일의식은 남북한 주민이 통일에 대해 갖는 사상·관념·감정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포함한다. 전태국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통일의식은 단일적·통합적·조화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고 갈등과 긴장을 내포할 수 있다. 통일의식은 현실에서는 충분히 실현할 수 없는 통일국가의 이상이나 도덕적 열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내포할 수 있다.¹⁾ 이와 같은 통일의식의 양가성은 남한 주민이나 북한 주민이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는 한국 정치사회 변화의 측면과 남북 정부 간

1) 전태국, “통일의식의 변화와 권력 엘리트의 영향,” 한독사회학회 엮음, 『독일 통일과 동독 권력 엘리트: 남북통일예의 함의』(서울: 한올아카데미, 2011), p. 204.

관계의 변화로 인한 시대·상황적 배경 속에서 함께 맞물려 진행되어 왔다.²⁾ 1970년대~1980년대 기간에는 제한적인 범위의 표본집단, 특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위주의 통일의식 조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국민적 차원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식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탈냉전의 도래로 남북한 간의 고위급회담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선언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한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남북한 간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국민적 차원의 통일의식 연구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적 흐름에 맞춰 통일의식 연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다. 안득기의 분석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06년까지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는 약 23편의 연구성과물이 있는데, 이중 1970년대에 나온 논문은 약 2편 정도이고, 80년대에는 약 3편, 90년대에는 약 9편, 2000년대에는 약 8편 정도이다.³⁾

국민적 차원의 통일의식 여론조사는 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나 통일연구원과 같은 관 또는 반(半)관민 기관에서 실시되었다. 하지만 조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이뤄지거나 아니면 정책 현안을 반영하다보니 일관된 설문내용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조사 결과나 데이터도 대중적으로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연속 『통일의식조사』라는 제목으로 국민여론조사에 토대한 통일의식 연구 성과물을 내놓고 있으며, 조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내용을

2) 안득기, “북한 및 통일 의식 분석 -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1권 1호(2007), p.4.

3) 위의 글, p.6.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 원 자료를 대중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통일의식을 측정하려는 조사들은 여러 기관들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조사들을 통해 발표되는 통일의식은 엄밀하게 보면 남한 중심의 통일의식이다. 통일이 남북한 주민이 함께 달성해야 하는 민족적 과제라면,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이 어떠한지 남한 주민의 통일의식과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 주민의 사회·의식통합을 위한 준비는 역시 반쪽짜리의 불완전한 것이다. 아무리 남한 체제, 남한 사회, 남한 주민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라 할지라도 통합해야 할 대상은 북한 체제, 북한 사회,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어떠한 통일 또는 통합의 준비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탈냉전 이후 북한 체제,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나 이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주민이 통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⁵⁾

그런데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가장 최근에 북한을 떠나 온 탈북자들을 통하여 비록 간접적인 방식이라도 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상태를 파악해보려는 노력은 현재의 분단된 현실 속에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 비교분석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북한 주민통일의식조사의 경우는 국내 거주하고 있

4) 정은미, “남남갈등 극복을 위한 대북정책 합의기반 강화방안,”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136~137.

5) 정은미·송영훈, “북한 주민의 통일의식과 남한사회의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제24권 1호(2012), pp.221~254.

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로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탈북자들에게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의식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여러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들은 탈북연도가 다양하게 섞여있는 표본이었던 데 반해,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사의 표본은 조사가 이루어진 당해 1년 전까지 북한에 거주하였다가 탈북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제한하였다. 이렇게 표본을 제한한 것은 장기간 제3국 경유나 남한 사회에서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의식의 변형과정을 최소화하며, 경험에 바탕을 둔 의식의 동시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글에서 분석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조사 데이터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2011년~2013년)와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2011년~2013년)이다. 전자는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 조사이고, 후자는 국내 탈북자를 통해 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을 파악하고자 한 조사이다. 또한 전자는 2007년부터 매년 1회 실시되었고, 후자는 2008년부터 실시되었다. 하지만 조사의 연속성, 설문내용의 일치성, 표본의 동질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에 적합한 분석 자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조사 결과로 제한하였다. 이 글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두 조사에 대한 개요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자료에 대한 개요

	통일의식조사	북한이탈주민 통일의식조사
조사 표본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65세 이하 성인 남녀	조사가 이루어진 당해 1년 전까지 북한에 거주했다가 탈북하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조사 시기	2011년 7월 26일~8월 15일 2012년 7월 5일~7월31일 2013년 7월 1일~7월22일	2011년 4월 15일~6월 4일 2012년 4월 6일~6월 2일 2013년 6월 13일~7월 16일
표본 수	2011년 1,201명 2012년 1,200명 2013년 1,200명	2011년 105명 2012년 127명 2013년 133명
조사 방법	면대면 설문조사	면대면 설문조사
표본 추출	다단계층화무작위추출법	snowballing

이 글은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남북한 주민 간의 통일의식에는 어떤 차이점 또는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요인들이 남북한 주민의 통일 의식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은 통일담론과 통일정책 차원에서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변화가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이유, 통일 가능 예상시기,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집단적·개인적 이익, 사회문제의 개선), 상대방에 대한 존재인식과 친근감, 대북정책별 통일 기여도, 상대방 문화에 대한 접촉경험, 남북 상호이질성, 마지막으로 주변국과의 관계인식이다.⁶⁾

II. 통일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열망

통일에 대한 열망에서 남북한 주민 간의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⁶⁾ 일부 분석내용의 경우는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만 존재하여 남북한 주민의 의식 비교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용상 통일의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중요하다 판단되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 경우 2007년부터 2013년 까지 7년간의 조사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표 2〉에서 보이듯,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남한 주민은 과반을 간신히 넘긴다. 결국 2명 중 1명 정도만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절대다수가 아님을 말해준다. ‘반반/그렇지 않다’와 같은 유보적 태도 역시 20% 이상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늘어 23.7%에 이른다. 이와 같은 남한 주민의 응답 패턴과 달리 북한 주민의 응답 결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2011년에 95.2%, 2012년 93.7%, 2013년 93.3%로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미미하다. 이러한 남북한 주민간의 의식 격차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어휘가 가지는 일종의 ‘당위성’이 각 개인의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 이후 오랫동안 남한 국민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으며, 통일은 꼭 이뤄야 할 민족적 과제라는 당위적 의식이 통일의 희망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일종의 ‘조건 반사’적인 응답을 이끌어내었던 것이다.⁷⁾ 다시 말해서, 통일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기본 토대가 합리적 사고가 아닌 정서적 당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⁸⁾

그렇다면 북한 주민의 경우는 어떠한가. 남한 사회에 못지않게 북한 사회에서도 통일의 당위성이 규범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표 2〉에 나타난 남북한 주민 사이의 현격한 격차에 대해 남한 사회에서 통일의 당위

7) 권영승·이수정, “글로벌·다문화 사회의 통일 의식: N세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제1권 2호(2011), p.2.

8)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서울: 숲, 2000), p.105.

성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반면에, 북한 사회에서는 여전히 통일의 당위성이 건재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 달리 말해서, 남한 주민의 경우 통일을 현실주의적 또는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의식하는 반면에, 북한 주민은 여전히 통일을 규범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의식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이다. 당위적 사고가 아닌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주민이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삶의 열악한 환경은 그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갖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에게 통일은 자신이 처한 지금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탈출구이자 변혁일 수 있다.

〈표 2〉 통일 필요성 - 남북한 주민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필요함	남한 주민	53.7	57.0	54.8
	북한 주민	95.2	93.7	93.3
반반/ 그저 그렇다	남한 주민	25.0	25.0	21.6
	북한 주민	3.8	5.5	6.0
필요하지 않음	남한 주민	21.3	21.4	23.7
	북한 주민	1.0	0.8	0.8

Ⅲ. 통일 예상 시기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전망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예상 3년간의 데이터 추이를 보면, 남한 주민은 대체로 '20년 이내', '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장기적 통일 시기를 예상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 주민은 '5년 이내', '10년 이내'와 같은 단기적 통일 시기를 예상하는 대조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

이 대조적인 결과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북한 체제의 내구성 측면에서 본다면, 남한 주민의 경우는 북한 체제가 적어도 20년~30년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북한 체제에서 살았던 북한 주민은 오히려 북한 체제가 5~10년 정도밖에 유지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통일에 대한 열망과 관련하여 보면, 남한 주민은 통일로 인해 발생할 부담이나 남북한의 이질성 문제를 고려하여 단기간 내 통일을 원하기보다는 적어도 20년~30년 정도의 통일 준비기가 있기를 바라는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는 가능한 빠른 통일이 이뤄져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한 주민 모두 공통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응답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남한 주민의 경우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의 경우 25.8%로 다른 어떤 가능 예상시기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견해가 통일 예상시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적은 이제까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의 1/4이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큼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깔려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현상은 북한 주민의 경우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남한 주민에 비해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표 3>에 보이듯, 북한 주민의 경우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26.9%, 2012년 43.3%, 2013년 44.4%로 변했다. 특히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 북한 주민 사이에 통일에 대한 회의적 인식이 크게 증가했다.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통일에 대한 좌절감으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통일의 가능 시기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5년 이내	남한 주민	2,5	2,9	3,7
	북한 주민	20,2	11,8	12,0
10년 이내	남한 주민	16,3	14,5	13,3
	북한 주민	30,8	29,1	22,6
20년 이내	남한 주민	26,1	25,9	25,3
	북한 주민	12,5	8,7	8,3
30년 이내	남한 주민	14,0	17,8	13,7
	북한 주민	2,9	1,6	4,5
30년 이상	남한 주민	19,7	19,8	18,3
	북한 주민	6,7	5,5	8,3
불가능	남한 주민	21,4	19,2	25,8
	북한 주민	26,9	43,3	44,4

IV. 남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기대감

1.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

남한 주민의 경우 통일이 남한 사회에 전체 이익이 된다는 기대감은 절반을 간신히 넘긴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는 매우 압도적으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4〉에서 보이듯 남한 주민의 경우 3년간의 평균

값이 50.3%인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는 98.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 주민의 경우 2011년 100%, 2012년 96.9%, 2013년 99.2%로 절대적으로 기대감이 높다.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에서는 남북한 주민 간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진다. 3년간의 평균값이 남북한 주민 각각 25.2%와 95.1%이다.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기대 차이는 위에서 살펴보았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격차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달리 말해서,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남한 주민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반면에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북한 주민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절대 다수가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남한 주민의 경우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집합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격차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북한 주민에게서는 그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통일이 가져다 줄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간의 인식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통일의식에 대한 양가적 태도, 즉 당위적 인식과 현실주의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두 인식 간의 격차가 크게 되면 결과적으로 통일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을 때 찬반의 여론이 크게 나뉘었던 것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느끼면서도 '통일세'와 같이 개인의 경제생활과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중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의 집단적 이익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 기대감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양자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통일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한 주민이 통일 편익에 대한 집단과 개인 차원에

서 느끼는 인식의 격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양자 간의 격차는 2011년 22.9%p, 2012년 25.6%p, 2013년 26.8%p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 양자 간의 격차가 2011년 4.8%p, 2012년 2.4%p, 2013년 3.7%p로 매우 작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 주민 간의 대조적인 차이는 북한 주민의 경우 북한 사회 전체는 물론 개인 차원에서도 모두 현재 처해진 경제상황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통일이 북한의 경제성장은 물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남한 주민의 경우는 통일이 실질적으로 진행됐을 때 남한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 자신이 경제·사회적으로 부담하거나 감내해야 할 부분(조세부담, 사회혼란 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하여 과연 남북한 주민이 상정하고 있는 통일 이후의 사회체제가 동일한가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2011년 한국방송공사(KBS)가 탈북상태가 아닌 중국을 오가는 102명의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통일이 어떤 체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 57.7%, 중국식 일국양제 40.2%인 것으로 나타났다.⁹⁾ 반면에 자본주의 체제로의 통일은 102명 중 단 2명에 불과했다. 남한 사회가 주도하는 통일로 인해 발생할 편익과 북한 사회가 주도하는 통일로 인해 발생할 편익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에게서 나타나는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가 예상되는 통일의 방식과 통일 이후의 사회체제와 갖는 상관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⁹⁾ “KBS스페셜 통일 대기획: 제1편 북한 주민 통일을 말한다.”

(<http://office.kbs.co.kr/tongil>).

〈표 4〉 통일로 인한 이익 기대감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값
사회 전체	남한 주민	50.7	51.6	48.6	50.30
	북한 주민	100.0	96.9	99.2	98.70
개인	남한 주민	27.8	26.0	21.8	25.20
	북한 주민	95.2	94.5	95.5	95.07

2.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앞서 살펴본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에 대해 남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해볼 필요가 있다. 통일이 되기 이전에 주요한 사회문제들 -빈부격차, 실업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이 통일 이후에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남북한 주민의 응답 태도는 매우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남한 주민은 대체로 거의 모든 사회 문제들이 통일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반면에, 북한 주민은 압도적 다수가 설문지에 제시된 사회문제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런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수준이 높은 순서별로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니 공통점이 나타났다. 〈표 5〉에서 보이듯, 3년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개선에 대한 기대감 수준이 높은 사회문제를 순위별로 보면, 남한 주민의 경우 실업문제(23.8%) > 빈부격차(13.4%) > 이념갈등(12.4%) > 지역갈등(10.10%) 순서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의 경우는 실업문제(85.7%) > 빈부격차(83.1%) > 이념갈등(58.9%) > 지역갈등(51.9%) 순서로 나타났다. 두 응답집단 간의 격차는 크게 존재하지만 통일로 인해 경제발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취업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또 지역갈등 문제는 가장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남북한 주민 모두 공통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실업문제나 빈부격차 문제에서 남북한 주민 간의 큰 격차는 통일 이후 통일편익의 분배 불평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지역갈등과 이념갈등 문제에서 남북한 주민 간의 격차가 크지 않고 공통적으로 기대감 수준이 낮다는 것은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간의 지역갈등, 이념갈등 문제가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가장 어려운 과제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표 5〉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 정도(2011년) - “개선된다” 응답률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값
빈부격차	남한 주민	13.1	12.2	14.8	13.37
	북한 주민	82.8	79.9	86.5	83.07
실업문제	남한 주민	25.5	23.6	22.3	23.80
	북한 주민	86.4	80.5	90.1	85.67
지역갈등	남한 주민	10.0	10.9	9.2	10.03
	북한 주민	51.5	49.6	54.5	51.87
이념갈등	남한 주민	13.5	13.5	10.2	12.40
	북한 주민	62.7	53.3	60.6	58.87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이나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같은 측정지표를 통해 통일의식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적 주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병수는 실용주의적 접근은 통일이 가져오게 될 이익이나 분단이 초래하는 비용을 근거로 통일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통일을 자기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는 도구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고 지적한다. 또 그는 이러한 경제주의적 사고가 압축적 근대화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경제로 환원시켜 이

해하는 데 익숙한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꼬집고 있다. 그는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이라는 말에도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만연된 경제주의적 관점이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¹⁰⁾ 대신 그는 통일의 이익 혹은 손실을 말하기보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통해 겪고 있는 분단의 고통에 더 방점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미래의 어떤 상태에 대한 득실의 계산보다는 지금 당장의 고통해소가 윤리적 차원에서도 인간의 삶의 가장 우선적이고 절박한 문제라고 주장한다.¹¹⁾ 결론적으로, 그는 통일이 남북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통일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우리가 통일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분단 상황이 남북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구조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다.¹²⁾

이병수의 비판과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이 적다고 생각하고 현상유지를 바란다고 하여 우리 정부가 과연 통일의 노력을 중단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분명히 통일의 당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통일을 정부의 의지만으로 추진한다고 하여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통일 환경의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통일 담론이 실용주의적이냐 당위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가치지향의 보편성과 실천 과정의 민주성을 담아내고 있느냐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10)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시대와철학』 제21권 2호 (2010), pp.367~372.

11)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pp.372~373.

12)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p.385.

V. 상대방에 대한 존재인식과 친근감

1. 상대방에 대한 존재 인식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른 이미지들이 혼재하여 있다. 북한은 적대국이면서 동시에 민족공동체의 일부이고 국제정치적으로는 별개 국가와 같은 지위를 점하고 있다. 이 상이한 성격과 결부된 다중적 이미지는 현실 속에서 서로 다른 의견과 정책지향으로 나타나 남남갈등 및 정치적 균열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¹³⁾ 북한을 어떤 존재로 파악하는가는 사실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지닌 이미지 효과가 크다. 박명규·이상신은 국제정치에서 ‘국가 이미지(national image)’는 독립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국가 이미지’로 개념화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을 일반적인 ‘국가 이미지’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이미지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한다.¹⁴⁾

〈표 6〉에 보이듯 3년간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우선 남한 주민의 경우 협력대상(44.8%) > 경계대상(19.9%) > 지원대상(16.3%) > 적대대상(14.7%) > 경쟁대상(4.2%) 순서로 북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순서는 3년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북한 주민의 경우는 협력대상(59.7%) > 경계대상(14.7%) > 적대대상(13.4%) > 지원대상(9.9%) > 경쟁대상(1.9%) 순서로 남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 남북한 주민 공통적으로 협력대상

¹³⁾ 박명규·이상신, “현상과 이미지: 북한 이미지의 측정과 분석,” 『통일과평화』 제3집 1호(2011), p. 132.

¹⁴⁾ 위의 글, p.143.

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남한 주민보다는 북한 주민의 응답률이 더 높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이 인민들에게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고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사상교육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에게 남한은 적대대상이 아닌 같은 민족으로서 협력해야 하는 대상의 이미지가 더 우선한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경계대상인 점도 공통적이다. 이 유형에서는 남한 주민의 응답률이 북한 주민보다 더 높다. 순서상 차이점은 세 번째에서 나타난다. 남한 주민의 경우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 지원대상인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는 적대대상이 세 번째로 응답비중이 많다.

하지만 응답비중이 아닌 3년간의 응답률 추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 남한 주민의 경우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응답률이 2012년 47.1% → 2013년 40.4%로 변했는데 이명박 정부에 비해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응답률은 2012년 10.9% → 2013 16.4%로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1년 사이에 협력대상으로 보는 응답률 감소 폭만큼 적대대상으로 보는 응답률이 증가한 셈이다. 올해 초부터 북한의 3차 핵실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을 보는 이미지가 협력대상에서 적대대상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는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응답률이 2012년 64.6% → 2013년 63.9%, 적대대상으로 보는 응답률이 2012년 12.3% → 12.8%로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주민 간 응답률 변화의 이러한 차이는 측정기준 연도의 차이로 인해 남북관계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발생한다. 남한 주민의 경우와 달리 북한 주민의 경우 조사는 2013년에 실시된 것이지만 이들이 북한에 최종적으로 거주했던 연도는 2012년으로 1년여 간의 남북관계 인식에 대한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4년에 실시하는 조사에서는 2013년에 남북관계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남한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의 인식이 좀 더 부정적인 쪽으로 늘어날 여지가 있다.

〈표 6〉 상대방에 대한 존재 인식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값
협력대상	남한 주민	47.0	47.1	40.4	44.83
	북한 주민	50.5	64.6	63.9	59.67
지원대상	남한 주민	16.7	15.8	16.4	16.30
	북한 주민	11.4	5.4	12.8	9.87
경계대상	남한 주민	17.2	21.3	21.2	19.90
	북한 주민	21.0	12.7	8.3	14.00
적대대상	남한 주민	16.8	10.9	16.4	14.70
	북한 주민	15.2	12.3	12.8	13.43
경쟁대상	남한 주민	2.3	4.8	5.6	4.23
	북한 주민	1.9	1.5	2.3	1.90

2. 상대방에 대한 친근감

독일통일의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과제는 사회통합이 될 것이다. 현재 남북한 주민들이 각각 상대방 존재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조사 결과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보다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⁵⁾

〈표 7〉에서 보이듯 3년간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남한 주민의 경우

남한 사회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률이 40.8%인 반면에, 북한 주민(남한 거주 탈북자) 경우는 남한 출신 주민들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률이 89.7%인 것으로 나타나 두 응답집단 간의 응답률 격차가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3년간의 평균값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표면적인 결과는 북한 주민에 비해 남한 주민의 배타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3년간의 응답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상이한 현상이 발견된다. 남한 주민의 경우 남한사회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률이 2011년 40.9% → 2012년 39.5% → 2013년 42%로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남한사회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남한출신 주민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률은 2011년 92% → 2012년 89.7% → 2013년 87.3%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남한 주민의 경우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증가하면서 접촉기회가 많아지고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면서 낯선 대상에서 친숙한 대상으로 변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 주민(엄밀하게는 남한 거주 탈북자)의 경우 남한 출신 주민이 갖고 있는 배타적 정서를 점차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상대방에 대한 친근감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값
친근함	남한 주민	40.9	39.5	42.0	40.80
	북한 주민	92.0	89.7	87.3	89.67
친근하지 않음	남한 주민	58.9	60.5	58.0	59.13
	북한 주민	8.0	10.3	12.8	10.37

15) 이 응답결과는 질문이 약간의 다르다는 점을 밝혀둔다. 남한 주민의 경우 남한 사회에 거주하는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을 물었고, 북한 주민의 경우 남한 사회에 거주하는 탈북자에게 남한 출신 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물었다.

VI.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경험과 이질성

오랜 분단체제는 남북한 간의 상이한 정치체제의 수준을 넘어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다시 말해서, 분단은 단순히 지역적인 분리의 경계표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으며, 따라서 분단은 상이한 두 삶의 양식을 지닌 두 사회구성체의 분열적 존립을 뜻하기도 한다.¹⁶⁾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의 과정은 남북한 주민 간 상이한 삶의 양식의 일체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탈냉전이 도래하기 이전 남북한 모두에서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접촉 그 자체를 반국가적 행위나 다름없는 것으로 철저히 취급해 왔다. 하지만 탈냉전과 함께 그리고 대북정책의 변화로 남북한 주민 모두 상대방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늘어났다. 남한 주민의 경우는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마스크, 탈북자의 증언, 방북 등을 통해 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접촉의 경험이 늘어나게 되었다.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는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의 형태 또는 친인척의 방문 선물이라는 형태로, 때로는 인맥의 신뢰관계를 통해 남한의 사회문화가 유입되고 확산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회변동이 공식적으로 남북한 사회문화 분야의 완전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남한의 경우 ‘국가보안법’이 접촉을 제약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공간의 주요 단속 사항이다.

그렇다면 남북한 주민은 서로 얼마나 상대방의 문화를 접촉하고 경험을 하는지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남한 주민의 북한 문화 경험 정도는 북한 주민이 남한 문화 경험 정도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16)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pp.25~26.

육이 남북관계의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기회가 현격히 줄어들고, 마스크를 통해 노출되는 북한문화 관련 정보의 양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북한 관련 정보 접근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남한 주민이 북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표 8>에 나타나듯이 남한 주민이 북한 문화를 접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2011년 31.5% → 2012년 32.3% → 2013년 27.3%로 박근혜 정부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는 외부정보 유입에 대한 강한 국가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한문화를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2011년 76.7% → 2012년 90% → 2013년 88%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남한 문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만성적 경제침체로 인해 문화 영역에 투입할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줄었고, 또 인민들이 획일화되고 도식화된 북한 문화 콘텐츠에 싫증을 느끼면서 대체 문화소비의 하나로써 남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남한 문화 경험에 대한 높은 응답률은 한편으로는 북한에서의 한류 영향이 점증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설문조사의 표본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1년 조사부터는 표본 구성에서 ‘직행탈북자’¹⁷⁾ 비중이 높은데, 이들은 북한에서 거주했던 당시에 이미 남한 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북한지역에 거주할 당시에 이미 남한 문화에 대해 친숙해지는 경험은

17) 북한 지역을 떠나 남한으로 들어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짧은 탈북자를 일컫는다. 대체로 탈북에서 입국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은 대체로 남한이나 중국 지역에 가족 또는 친인척의 인맥을 이용하여 이들의 중개로 미리 설정된 탈북 경로를 통해 신속히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 주민이 남한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남한 주민은 북한 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오히려 북한 주민에 비해 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경험 있다	남한 주민	31,5	32,3	27,3
	북한 주민	76,7	90,0	88,0
경험 없다	남한 주민	68,5	67,7	72,7
	북한 주민	22,3	10,0	12,0

VII. 남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

오랜 분단체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인식 구조 역시 크게 변화시켰다. 한반도 분단체제를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로 규정하는 분단체제론의 주장처럼, 남북한 주민의 국제관계 인식에서는 블록화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9〉에 보이듯, 가장 가까운 나라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선택은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보인다. 남한 주민의 경우 10명 중 7명은 가장 가까운 나라로 미국을 선택했고, 북한 주민의 경우는 10명 중 7명 이상이 가장 가까운 나라로 중국을 선택했다. ‘가장 가까운 나라’라는 말은 이념, 제도, 생활양식, 정서적 측면 모두에서의 근접성을 포함하는 다중적 의미를 포함한다. 각각 동맹국의 자리를 이어 두 번째로 가까운 나라에 남북한이 위치한다는 것은 분단체제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흥미로운 것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주변국 인식이 밀접하게 상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남한 주민이 느끼는 미국에 대한 친밀감은 2012년 65.9%에서 2013년 76.2%에 나타나듯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의 경우도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2012년 70.4%에서 2013년 82%로 증가하였다. 달리 해석하면, 남북관계의 균열은 동맹국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9〉 주변국 친밀감 - “가장 가까운 나라” 응답률

(단위: %)

		2012년	2013년	평균값
미국	남한 주민	65.9	76.2	71.05
	북한 주민	1.6	1.5	1.55
일본	남한 주민	6.8	5.1	5.95
	북한 주민	0.8	0.0	0.40
북한/남한	남한 주민	20.6	11.0	15.80
	북한 주민	24.0	12.8	18.40
중국	남한 주민	5.8	7.3	6.55
	북한 주민	70.4	82.0	76.20
러시아	남한 주민	0.9	0.5	0.70
	북한 주민	3.2	2.3	2.75

〈표 10〉은 남북한 당국의 이데올로기가 국민의식을 어떻게 변형시키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전태국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인의 통일의식은 분단 상황에서 지배층에 의해 생산된 반공주의 이념에 일치시키려는 기본적인 동일화 압력 하에서 통일문제에 대해 사고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¹⁸⁾ 2년간의 조사 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서 남한 주민이 북한을 지목한 비율은 52.1%인 반면에, 북한

주민이 남한을 지목한 비율은 4.9%에 불과하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남한 주민의 경우 북한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지목한 비중이 가장 많은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는 미국이 6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현격한 결과의 차이는 결국 남북한 당국이 누구를 주적으로 삼아 이데올로기화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남한의 경우 북한을 주적으로, 북한의 경우는 미국을 주적으로 분단체제의 책임을 이들 국가에게 돌렸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안보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서 중국을 지목한 남한 주민의 응답률 평균값은 25.9%, 북한 주민의 경우 21.3%로 두 집단 간에 응답률 격차가 크지 않다. 더욱이 북한 주민의 경우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중국을 선택한 비율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서 중국을 지목한 비중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것은 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이 매우 현실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체제 생존을 위해 중국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지만,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잠재적 위협성을 갖고 있음을 북한 주민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국제관계 인식이 매우 현실적임을 말해준다. 또 다른 측면에서 남북한 주민이 공통적으로 중국을 한반도 평화위협 국가로 지목했다는 것은 한민족으로서 중국에 대한 역사적 인식에 공통부분이 존재함을 말해준다.

〈표 10〉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

(단위: %)

		2012년	2013년	평균값
미국	남한 주민	9.5	4.4	6.95
	북한 주민	66.1	71.4	68.75

18) 전태국, “통일인식의 변화와 권력 엘리트의 영향,” p.206.

일본	남한 주민	12.3	16.0	14.15
	북한 주민	3.3	6.8	5.05
북한/남한	남한 주민	47.3	56.9	52.10
	북한 주민	8.3	1.5	4.90
중국	남한 주민	30.5	21.3	25.90
	북한 주민	22.3	20.3	21.30
러시아	남한 주민	0.4	1.3	0.85
	북한 주민	0.0	0.0	0.00

VIII. 결론

다년간의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을 비교해 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주민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은 점차 약화되는 반면에 북한 주민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높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들어 남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남한 주민의 통일 인식은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통일에 대한 열망 수준이 높은 반면에, 반대로 남북관계가 나쁠 때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감소한다.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 일관되게 통일에 대한 높은 열망을 보이는 것은 통일이 궁핍한 삶으로부터 자신을 탈출시켜 줄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는 남한 주민에 비해 북한 주민이 더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한 주민의 경우는 20~3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가장 많고,

북한 주민의 경우는 5~1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북한 주민의 예상 시기가 더 빠르다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두었다기보다 빠른 시기에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비관론의 확산은 통일의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며, 이러한 현상이 남북한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 남한 주민에 비해 북한 주민이 훨씬 더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주민은 통일이 집단적 차원에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더 지배적이다.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는 절대다수가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통일이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남한 주민은 통일로 인해 발생할 부담 증가를 먼저 염려하는데 북한 주민은 통일이 가져다줄 편익을 기대하는 것은, 현재의 남북한 경제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남북한 주민이 통일 이후의 사회에 대해 상이한 미래를 그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흥미롭게 남북한 주민 모두 통일 이후에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사회문제는 실업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북한 주민 모두 현재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임을 보여주며, 남북한 주민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 통일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남한 사회가 현재 처해있는 사회문제의 개선이 통일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넷째, 남북한 주민 모두 상대방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경계대상, 적대대상으로서의 인식이 크게 증가하였고, 반면에 지

원대상이라는 인식은 줄어들었다. 또한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에 느끼는 친근감도 큰 격차를 보였다. 이것은 전태국도 지적했듯이, 북한 주민에 대한 민족 연대감과 이질감의 양가적 감정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주민에 대해 ‘우리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동질감을 느끼는 것은 아닌 것이다.¹⁹⁾ 또한 상호 수용성의 격차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오히려 북한 주민보다 남한 주민의 배타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오랜 분단체제는 남북한 간의 상이한 정치체제의 수준을 넘어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탈냉전이 도래하기 이전 남북한 모두에서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접촉 그 자체를 반국가적 행위나 다름없는 것으로 철저히 취급해 왔다. 하지만 탈냉전과 함께 그리고 대북정책의 변화로 남북한 주민 모두 상대방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늘어났다. 하지만 남한 주민의 북한 문화 경험 정도는 북한 주민이 남한 문화 경험 정도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남북관계의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기회가 현격히 줄어들고, 마스크를 통해 노출되는 북한문화 관련 정보의 양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북한 관련 정보 접근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남한 주민이 북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국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상이한 인식 구조를 형성하였다. 남한은 반공교육을 통해, 북한은 반미교육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서 남한 주민은 북한을, 북한 주민은 미국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주민 모두 2순위로 중국을 공통적으로 지목했다는 점은 남북한 주민의 역사인식에서 공통성이 존재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현실주의적 국제관계 인식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안타

19) 전태국, “통일인식의 변화와 권력 엘리트의 영향,” pp.224~226.

깝게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남한과 북한을 서로 선택하기 보다는 남한 주민은 미국을, 북한 주민은 중국을 압도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분단체제가 만들어놓은 비극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일 여론 조사는 정부가 통일·대북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정책의 집행과정 및 사회적 여론의 수렴 차원에서 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이 지나고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동안 우리 국민의 통일인식은 점점 더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근본적 원인은 북한 정권의 행동에 대한 실망감에서 기인하겠지만, 역대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과연 국민의 통일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통일기반 구축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3대 목표 중 하나이다.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안에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신뢰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의식차원에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통일 이후의 사회와 삶에 대한 기대수준을 통해 투영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조사결과와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 국민은 통일로 인해 발생할 편익에 대한 기대감도 낮을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사회상에 대한 기대수준도 매우 낮다.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불신은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한 데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정권교체 때마다 대북·통일정책이 바뀌고, 나아가 정권 출범 초기에 의욕적으로 표방한 대북·통일정책 또한 실천 영역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단행본

-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서울: 솔, 2000.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국문논문

- 권영승 · 이수정. “글로벌 · 다문화 사회의 통일의식: N세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제1권 2호(2011).
박명규 · 이상신. “현상과 이미지: 북한 이미지의 측정과 분석.” 『통일과평화』, 제3집 1호(2011).
안득기. “북한 및 통일 의식 분석 -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1권 1호(2007).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시대와철학』, 제21권 2호(2010).
전태국. “통일의식의 변화와 권력 엘리트의 영향.” 한독사회학회 엮음. 『독일 통일과 동독 권력 엘리트: 남북통일예의 합의』.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1.
정은미. “남남갈등 극복을 위한 대북정책 합의기반 강화방안.”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9.
정은미 · 송영훈. “북한 주민의 통일의식과 남한사회의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제24권 1호(2012).

The Changes of Attitude toward Re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Focusing on Analysis of the Surveys, 2011~2013

Jeong, Eun-Mee (I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ttitude toward reunification includes not only thoughts, ideas, and feelings about reunification, but also the will and desires for reunification. The surveys conducted over the last three years using the sample of North and South Koreans try to examine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the changes of and the development of the attitude toward reunification and its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In this study, the data of "Unification Attitude Survey" and "Attitude of North Korean Defectors Survey" conducted by Institute of Peace and Unif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2011 to 2013 are used.

According to the data, first, while the need for reunification by South Koreans has gradually been decreased, North Koreans have shown a strong desire and the need for reunification. Second, North and South Koreans have a different opinion about the time for the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comparison with South Koreans, North Koreans are more likely to expect to unify the two Koreas in the near future. However, North and South Koreans see the once-conceivable prospect of reunification on the peninsula as increasingly unrealistic. Third, not surprisingly, the findings

show that North Koreans have higher expectations of reunification benefit. Forth, North and South Koreans recognized each other as a cooperative partner. But, with the antagonistic rhetoric and nuclear threats from North Korea reaching unprecedented heights, a hostile attitude has significantly been increased in the last couple of years. Fifth, political and social differences have been developed between the North and South since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Finally, North and South Koreans have a different view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Note that North and South Koreans are likely to conside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respectively as a nation which threatens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attitude toward reunification, inter-korean relations, reunification benefit, reunification cost, social integration, tolerance, exclusion

정은미(Jeong, Eun-Mee)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저서와 논문으로는 『남북통합지수 2008-2013: 변동과 함의』(공저), “북한사회의 개방화 실태와 분절적 구조”, “월남자 가족’ 출신 탈북자의 사회관계자본의 변화” 등이 있다.